

리멤버 미: 세월호에서 배제된 아이들을 위한 묵시론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추모가 아닌 맹세의 언술

"아디오, 아디오 리멤버 미(Adieu, Adieu, Remember me)." 햄릿 앞에 나타난 그의 부친 유령이 덴마크에 닥친 재난의 진실을 알리고 사라지기 직전 했던 말이다. 햄릿의 부친은 동생 클로디오스의 계략으로 피살당한 뒤, 유령으로 나타나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아들 햄릿에게 고한다. 종이 한시를 알릴 때 병사들이 지키는 망루 위로 나타나는 유령은 망루를 지키는 바나도 앞에서 출몰했다 사라진다. 유령의 존재는 바나도에서 햄릿의 친구 호레이쇼에게, 호레이쇼에서 다시 햄릿에게 전달된다. 햄릿은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자 같은 시각 망루에 올라선다. 그리곤 죽은 그의 부친, 선왕의 유령 앞에 선다. 유령을 통해 죽음의 진실을 알게 된 햄릿은 부친의 유령이 "잘가라, 잘가라, 나를 기억하라"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진 후 성벽 밑 빈터에서 다음과 같이 맹세한다.

잊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지요 내 기억의 수첩에서 하찮은 기록일랑 짝짝 지워버리겠습니다. 책에서 얻은 모든 격언 젊었을 때 관찰해서 얻은 모든 형상과 모든 기억일랑 지워버리겠습니다. 당신의 명령만을 기억 속에 간직하고 하찮은 것들과 섞이지 않겠습니다. 맹세코 그러하겠습니다.

"리멤버 미." 햄릿을 향해 유령이 당부한 이 말은 아마도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떠난 단원고등학교 아이들이 살아 있는 유가족들과 우리들에게 던지는 말일 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햄릿이 부친의 유령을 보고 내뱉은 저 처절한 독백은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떠난 단원고등학교 아이들을 향한 우리들의 다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다만 억울한 죽음은 같되, 부모와 자녀 간에 죽은 자와 산자의 위치가 바뀌었을 뿐이다.

세월호 참사 후 사망했거나 실종된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가 던진 메시지 중에서 가장 많았던 말은 "미안합니다",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였다. "못난 어른들이 되어 미안합니다", "천국에 가서 못다 한 꿈을 이루기 바래. 정말 미안하고 미안하다 잊지 않을게.", "아들아 딸들아 우리 어른들이 너무 미안해. 사랑한다. 정말 미안해.", "어른들의 잘못으로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구나. 부디 하늘나라에서라도 못다 이룬 꿈 이루고 행복하게 사시오 정말 미안하다." 시청 앞 분양소 옆에 걸린 비망록들이다. 마치 햄릿이 유령이 던진 마지막 말을 되뇌이며,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라고 반복했던 말과 흡사 유사하다. 망자를 위해 세상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통상 할 수 있는 이 말은 망자의 마지막 유언에 답하는 의례적인 수사일 수 있겠지만, 친족살해와 반역이 뒤덮인 폐허의 왕국 덴마크의 운명 앞에서, 마지막 유령의 당부와 그 앞에서 행한 햄릿의 맹세가 그러하듯이, 결코 그 말들은 망자에 대한 형식적 조문의 수사학일 순 없다.

억울하게 죽은 유령의 대사, "리멤버 미"는 통상 "나를 기억하라"로 번역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내 말을 명심하라"라는 뜻이 들어가 있다. 유령의 마지막 유언은 단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추모하라는 당부가 아닌, 내가 말한 죽음의 진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는 간절한 요청을 담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었거나 실종된 사람들을 향한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말 역시 추모를 위한 "조문의 언술"이 아닌, 죽음의 진실과 현실의 상황을 명심하는 "맹세의 언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묵시적이고 실존적이다. 그것이 묵시적인 것은 재난의 상태가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끔찍하기에 재

난의 순간이 그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이 사태를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계시의 순간 같기 때문이다. 그것이 실존적인 것은 그 사태의 원인이 언제나 이미 내재되어 있어 그 재난이 '현사'와 '징후'의 순간들을 반복하며 또 다른 재앙으로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세월호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응축된 표상물이며, 세월호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그 모순의 대체 과정이다. 그리고 세월호의 재난은 그 응축과 대체가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애초에 운항하면 안 되는 불량품이었던 페리, 그 페리의 사용기한을 너무 쉽게 연장시켜준 국가, 복원력을 잃게 만든 고질적인 과적, 끔찍한 과적과 불량 작동의 반복을 다시 용인한 국가, 침몰 후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선장과 승무원의 무한 이기심, 재난에 대처하는 매뉴얼의 실종과 통제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한 국가의 통치적 대응과 주류 미디어의 정치적 굴종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억압의 총체를 보는 듯하다.

베를린 예술대학의 한병철 교수는 독일의 한 일간지 기고에서 세월호 사태를 노동유연화, 민영화, 규제완화를 야기한 신자유주의의 메타포이자 신자유주의의 국지적 알레고리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침몰한 세월호는 한국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가라앉는 배에서 탈출한 선장은 공공심을 그저 망상이게 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육신이라는 말한다. 그 말은 올바르고 적절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세월호 참사의 비극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 신자유주의라는 끔찍한 구조적 모순의 폭로를 넘어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이 있다. 그것은 재난의 위험을 상존케 하는 신자유주의의 시장 자본과 그것을 용인하는 국가 통치에서 도대체 누가 압도적으로 배제되었는가이다. 노동자? 승무원, 부모들? 아니다. 우리가 목도했듯이 세월호에서 압도적으로 배제된 자들은 바로 수학여행을 떠난 수백 명의 아이들이다. 모두가 신자유주의의 희생자였지만, 그중 아이들은 기성세대의 전통적인 규율주의에 의해 이종으로 희생당했다. 아이들의 집단배제는 신자유주의의 지배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국지적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재난의 상황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철저하게 배제되었는지, 그 배제가 아이들의 무엇을 박탈하고 있는지를 간파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기억하겠다"는 말만 할 뿐, 아이들을 위한 맹세의 행동을 취하고 있지 못하다. 조문의 장구한 행렬 속에서 우리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 아이들을 위한 어떤 행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재난의 통치 매뉴얼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재난의 책임을 악랄한 청해진해운과 그 배후로 지목된 유병언, 그리고 그의 종교적 신원인 구원파로 돌리려 할 뿐, 왜 어떻게 아이들이 배제되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모두가 아프지만, 허망한 애도와 조문의 침묵에 휩싸이고, 재난 그 자체에 대한 책임규명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그 재난에서 배제된 아이들의 일상의 재난에 대해서는 거의 말을 하고 있지 않다.

아이들을 향한 우리의 "맹세의 언술"은 그래서 목시적인 사태의 심각함을 간파하고 아이들의 실존적인 문제의 엄중함을 명심하는 것이어야 한다. "맹세의 언술"이 무고하게 죽거나 실종된 아이들의 "진실의 조문"이 되기 위해 유령의 간절한 호소와 햄릿의 결연한 맹세가 그러했듯이 실존적인 문제의식과 실천적 행동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호명된 집단규율

2014년 5월 5일 현재 세월호에 탑승한 476명 중에서 174명이 구조되었고, 259명이 사망, 43명이 실종되었다. 참사가 20일 넘도록 아직 많은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그들은 여전히 바다 어딘가에서 유령으로 떠돌고 있다. 재난의 스펙타클, 그것의 끝 모를 지속으로 우리는 지금 집단 트라우마의 블랙홀에 빠져들고 있다. 집단 트라우마의 강도가 더욱 거센 것은 아마도 사망자, 실종자의 대부분이 수학여행을 떠난,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의 아이들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등학교 325명 중에서 구조된 학생들은 70명에 불과하다. 승무원을 포함해 학생이 아닌 일반 승객들 151명 중에서 104명이 구조된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죽거나 실종된 상태이다. 낮은 구조율은 단순히 단지 우연이 아닌 구조적인 원인을 배태하고 있다. 사실상 학

생들은 이 재난의 구조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었고 삭제되었다.

학생들이 "구조에서 배제된 구조"의 원인이 무엇일까? 일차적으로는 긴급 상황 시 승객들을 버리고 도망간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직업윤리 의식 때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학생들에게 일상적으로 강요된 "호명된 집단규율" 때문이다. 실제 배가 큰 충격과 함께 침몰하기 시작할 때 방송에서는 객실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반복되었고, 공개된 학생들의 SNS 메신저에서도 침몰의 긴급한 상황을 알리는 가운데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는 문자들이 반복되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익숙하게 방송의 지시대로 객실에서 가만히 있었고, 결국 가만히 기다린 학생들은 대부분 죽거나 실종되었다. 재난의 비극은 오로지 가만히 있으라는 승무원의 잘못된, 무책임한 판단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그 호명을 아무런 의심 없이,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드리게 된 체화된 규율과 통제의 호명 체계 때문이다.

아이들의 신체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집단적 규율을 자명하게 받아들이는 습관에 익숙해져 있다. "앉아, 일어나, 차렷, 열중 셋, 줄맞춰"와 같은 군대식 신체 규율에서 "정신 차리고 공부해라, 선생님 말씀에 복종해라"와 같은 감정의 규율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은 학교와 학교 밖에서 정해진 규율의 규칙들을 몸 안에 각인시키도록 교육을 받는다. 겉으로 보기에 몇몇 불량한 아이들의 태도와 의식은 규율과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듯하지만, 그 역시 집단으로부터의 배제에 대한 공포의 반작용이라 할 수 있다. 학생, 혹은 아동 청소년 집단을 향한 규율의 호명체계는 다수의 복종을 통한 소수의 저항을 배제의 원리로 다스리는 통치술을 가지고 있다. "찍히면 죽는다"는 공포감 말이다. 집단적 호명에 저항해 다른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에게 가하는 배제의 시선과 처벌은 아이들에게 재난에 대처하는 유연한 직접 행동을 거세해버린다. 배제의 공포는 규율을 자명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고, 결국 배제되지 않기 위해 호명의 규율을 자명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궁극적인 배제의 원인이 되어 버렸다. 세월호에서 아이들의 집단 비극은 바로 배제에 대한 공포를 재생산하여 규율을 절대화한 것에서 비롯된다. 아이러니하게도 배제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규율에 순종한 것이 죽음이란 궁극적 배제의 이유가 되어 버린 것, 이것이 세월호 재난의 진실 중의 하나이다.

학생들을 향해 가만히 있으라는 승무원의 호명은 아마도 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익히 들어왔을 것이다. 장소와 시간 그리고 사건의 맥락은 다르겠지만, 학생들은 어릴 적부터 교실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수학여행에서 그 호명에 익숙하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구속하는 하나의 규율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루이 알튀세르가 언급했듯이 이데올로기는 "개인이 사회적 실재와 맺는 가상적 관계"이다.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은 재난에 대비하는 유익한 정보가 아니라 그들이 일상에서 슬하하게 들어왔던 복종의 재연이었을 거다. 특히 방송의 언술은 전체 승객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집단 승선한 수백 명의 학생들을 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세월호 승무원은 학생들의 집단행동을 차단하기 위해 학생들을 향해 가만히 있으라는 당부가 아닌 명령의 언술을 던졌다. 명령에의 복종이 재난의 사태에서 결코 자명하지 않음에도 학생들은 늘 익숙하게 들었던 언술에 호명당하며 침몰이라는 사회적 실재의 상황 속에서 그것이 안전할 것이라는 가상적 동의를 한 셈이다. 재난의 상황에 놓인 구체적인 개인들이 늘 자명하게 학습 받아왔던 명령의 언술에 의해 구체적인 규율의 주체로 호명된 것이다. 결국 집단에 개한 규율의 호명은 집단의 비극을 몰고 왔다.

174명의 생존자 중에서 단원고 학생들은 70명이 구조되었다. 구조된 학생들과 구조되지 않은 학생들의 결과를 운명, 혹은 우연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생존자의 행동 때문이다. 실제 구조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대로 있으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행동한 사람들이었다. 『여성중앙』 4월호 기사에는 이번 참사에서 생존한 단원고 한 학생의 인터뷰가 실려 있다. 그 학생은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믿을 수 없어 구명조끼를 입고 밖으로 나왔다고 말하고 있다. 만일 그 학생이 방송의 말대로 객실에 가만히 있었다면, 과연 생존할 수 있었을 지 의문이다.

재난에 대처하는 아이들의 자세는 일상에 대처하는 아이들의 자세를 보면 알 수 있다. 재난에 대처하는 매뉴얼에서 특히 아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명령에 복종하는 것뿐이다. 세월호 참사는 청소년들에게 명령에 복종하는 것만이 재난에 대처하는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명령에 대한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라 명령의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여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명령이 만일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스스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우는 능력, 그리고 명령의 언술과 상관없이 자율의 행동을 활성화시키는 능력이다. 집단적 규율은 형식적인 매뉴얼에 따른 복종의 내성의 원리에 불과하며, 자율의 행동은 호명된 집단적 규율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발적 재난의 사태에 더 적절한 것이며, 결국 재난의 구조 불가능성을 가능하게 만드는 내재적인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죽어가는 아이들

한국 사회에서 아동 혹은 청소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저출산에 따른 1인당 아이 육아와 성장에 부모들이 투자하는 비용이 과거보다 높아졌지만 아이들은 결코 안전하지도 행복하지 않다. 아이들은 각종 재난사고, 유괴, 성폭력의 피해에 노출되어 있고, 잔인한 입시교육 체계에서 생존하기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강도 높은 훈육을 받는다. 경제적으로 풍요롭다고 하지만, 가정이 파괴당한 저소득층 아이들은 여전히 당장의 끼니를 걱정해야 한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풍족하게 혼자 자라서 버릇없다고, 선생님들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들의 수업태도가 매우 불량하다고 개탄을 하지만, 불량한 근원이 타율적 행위에 대한 굴종에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의 무례함과 이기심은 자율행동의 허용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처음부터 아무런 권리를 주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든 집단 훈육 때문이다. 아이들은 여전히 가정과 학교에서 훈육당하고 있고, 매우 위험한 주변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아이들의 돌봄과 교육이 시장에 의해 관리되면서 아이들의 실질적인 행복지수는 오히려 투자비용에 반비례한다. 돌봄과 교육을 위한 사적 시장이 늘어난 만큼, 시장이 통제하는 매뉴얼에 종속된 아이들의 수동적인 환경은 그만큼 늘어난다. 옛날 흙먼지 먹으면서 동네에서 뛰어놀던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아무런 대기없이 동네주민들이 돌봐주던 시절은 얼마나 행복했었는가? 이미 유아기 때부터 공동체 돌봄의 자발적인 환경으로부터 분리되어 관리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아이들의 돌봄을 대부분 규격화된 시장에 맡겨야 하는 지금의 현실은 분명 아이들에게 행복하지 않다.

아이들을 위한 수많은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 성장프로그램, 돌봄 프로그램들이 있음에도, 아이들이 각종 사건, 사고, 재난과 같은 불행한 상황에 빠지는 사례들이 더 많아지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세계의 주요 국가들의 청소년들보다 훨씬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한겨레신문』 2014년 5월 2일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고로 목숨을 잃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숫자가 5998명으로 전체 사망자 대비 아동 청소년 수의 비율이 OECD국가 중 최고를 기록했다. 아이들은 익사, 타살, 추락, 화재, 중독 등의 사고로 2015명이 죽었고, 교통사고로 2152명, 자살로 1831명이 죽었다. 우리와 인구 규모와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스페인에 비해 사망자 수는 25배나 되고, 치안이 한국보다 훨씬 불안한 러시아와 멕시코보다 사고사 비율이 높다.

특히 아동 청소년이 집단적으로 죽은 대형 재난 사고를 보면,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이 있다. 그것은 죽어간 아이들이 대부분 부실한 집단 비즈니스 이벤트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점이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1999년 6월에 화성 씨랜드 화재사건은 유치원생 19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같은 해 10월에는 인천호프집에서 화재사고로 그 안에 있던 중·고등학교 학생 5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3년 7월에는 해병대 훈련캠프에 참가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훈련을 받는 도중 5명이 물살에 휩쓸려 죽었다. 그리고 2014년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로 입학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던 부산외대 신입생들 10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대형 사고들의 공통점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실한 집단 이벤트를 벌이다가 결국 그 부실한 환경이 원인이 되어 대형 재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화성 씨랜드 사건과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는 이벤트가 벌어진 부실한 숙소와 학습장 때문이며, 해병대 훈련캠프 사고는 구명조끼조차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채 훈련을 한 부실한 교육 운영 때문이었다. 인천호프집 화재 사건 역시 규정을 어기고 청소년들의 유흥을 방치한 것 때문이고, 세월호 참사 역시 안전보다 영리를 목적으로 제주도 수학여행 이벤트를 독점하다시피 한 청해진해운의 부실한 비즈니스 때문이다.

화성 씨랜드에게 유아들은 어떤 존재였을까? 인천호프집 사장님에게 학생들은 어떤 존재였을까? 그리고 청해진해운에게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란 어떤 존재였을까? 어른들의 비즈니스는 이벤트에 참여한 아이들을 "두당 얼마"로 밖에 간주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안전과 행복보다는 아이들을 통한 돈벌이의 반복이 어른들의 비즈니스의 모든 것이었을 것이다. 수학여행, 수련회, 극기 훈련 등 지금까지 한국에서 행해진 아이들을 위한 모든 집단 이벤트들은 어린이들을 위한 것으로 가장한 어른들의 위한 비즈니스 이벤트라는 정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아이들을 위한 집단 이벤트에서 안전과 감수성은 언제나 뒷전이고, 규율과 통제, 그리고 불편한 담합과 뒷거래가 우선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이벤트 사업들은 연례행사로 반복되기 때문에 대개 합숙 시설이 열악하고 서비스 정신이 부재하며, 안전에 대해 무감하다. 학생 이벤트라는 인정된 문화여가 수요는 불량한 공급의 관행을 자명하게 만들었고, 담합과 뒷거래가 이 수요와 공급 관계의 상시적인 안전의 점검을 삭제시켜버렸다. 계약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이벤트들의 품질에 대해 발언할 기회는 사전에 차단된다. 학생들은 이벤트의 질과 안전에서 사실상 배제된 채 자신들을 위한 축제가 아닌 어른들의 돈벌이 행사에 동원된 것이나 다름 없다.

초등학교부터 시작된 이 집단이벤트에서 아이들은 또 한 번의 규율과 통제의 경험을, 또 한 번의 부실한 식단과 형편없는 숙박시설의 경험을 반복한다. 아이들이 이 집단 이벤트의 끔찍한 환경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함께 지낸 아이들과의 연대감과 몇 칠이면 집에 갈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지 않을까? 아이들을 상대하는 집단 이벤트의 대형 재난 사고는 이 찻짚하고 불쾌한 경험의 축적이 극한으로 진행된 어느 쯤에 벌어진 것이고, 결국 아이들은 죽음으로 또래 아이들만의 처연한 연대의 감수성의 대가를 치른 채,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어른들의 비즈니스는 아이들에 의한 어른들의 비즈니스로 재번역 되어야 한다. 죽어간 아이들은 어른들의 이기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집단 이벤트의 희생양이다.

이벤트 형 재난의 반복과 그로 인한 아이들의 집단 죽음에서 우리는 청소년들이 매우 위험하고 비정상적인 문화여가 시장에 포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량 시장은 청소년들을 할인된 상품으로 인지하며, 가격 할인의 대가는 안전의 공포로 회귀한다. 불량시장은 청소년의 안전, 문화, 인권을 애초부터 배제한다. 청소년의 배제는 안전의 배제로 규범화되며, 이는 재난의 임계점에서 사회적 집단 타살의 흥기로 돌아온다. 세월호에서 아이들의 희생은 사실상 사회적 타살인 셈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한 청소년 자살 역시 사회적 재난이자, 사회적 타살 중의 하나이다. 통계청이 밝힌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의 사망원인 중 1위는 자살이다. 2011년 한 해에만 373명의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는 전체 청소년 사망자의 26.5%나 되는 수치이다. 청소년 자살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 중 단연 1위이다. 이는 2002년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자살인구가 인구 10만 명당 6.0명에 해당(203명)에 해당되고, 청소년 사망원인에서 자살이 3번째 인 것과 비교하면 더 악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 이 정도면 청

1) 이동연, 「자살 권하는 사회: 청소년과 연예인 자살의 의미계열」, 『문화과학』, 78호, 참고

소년 자살도 사회적 재난의 유형에 해당된다. 극단적인 우울증에 의한 자살을 제외하고는 청소년 자살은 생명의 자기 배제를 통해 자신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가장 급진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이다. 사회적 관리 장치들은 청소년의 생명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는커녕 은폐한다. 청소년 자살의 원인을 분석하면 대개 학교 성적과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 학교 내 왕따와 폭력이 주를 이룬다. "육우당"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던 한 동성애 청소년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집단으로부터 배제당해 끝내 자살을 한 경우도 이성에 중심주의에 기반한 사회적 관리장치의 은폐 때문이다. 청소년 자살의 주원인은 청소년 내부가 아닌 외부라는 점에서, 그리고 규범과 훈육의 원리로 신체적, 정신적 불안의 상태를 마치 정상인 것처럼 은폐하려는 사회적 관리장치가 청소년의 자살을 방치한다는 점에서 그것 역시 세월호에서 죽어간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재난, 사회적 타살의 전범이다. 문제는 너무나 많은 모순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그들의 잘못도 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청소년을 보호해야한다

청소년들은 수많은 위험 사회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청소년 재난, 청소년자살, 청소년 성폭력과 같은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면,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보호해야한다는 주장이 정당성을 얻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지금 청소년은 진정으로 제대로 보호받고 있을까? 청소년보호의 정당성의 근원은 청소년 인권에서 나온다. 청소년 인권은 현상과 사태에 따른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주어진 그들만의 권리이다. 한국에서 청소년보호는 청소년과 관련된 각종 사회적 사건이 터진 후에 그 정당성을 요구하려한다. 청소년들이 사건 사고로 죽음을 당할 때, 청소년 성폭력이 심화될 때, 청소년 관련 반사회적 사건들이 터질 때, 우리 사회는 청소년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사건과 사태에 의거한 사후적인 청소년보호론은 본질적으로 청소년인권과 거리가 멀다. 청소년인권은 사후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유엔이 제정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제 6조에 따르면 "당사국은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물론 이 협약은 아동을 아직 성숙하지 않은 주체로서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하는 대상으로 명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생명의 고유한 권리로서 청소년의 인권은 특정한 사회적 상황과 사태에 우선하는 것이다. 청소년보호론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고려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청소년보호론은 청소년 인권의 보호와는 관계없이 사회적 관리장치, 혹은 사회적 통치성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청소년보호론은 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며 어른과 부모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주체라는 기본 원리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아동 청소년 권리에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에 대한 인식이 높은 반면, 청소년 참여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은 청소년보호론이 미성숙한 청소년을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아동의 권리는 보호의 대상, 대리의 대상을 전제할 때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아동의 참여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를 부모나 보호자가 대리할 수 있다는 가부장적 사고와 생활양식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봉건적 가치인 군사부일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이익을 대리할 수 있고, 교사는 학생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본다. 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대와 같이 부모와 자녀의 이해관계가 다를 때조차도

법령은 부모에게 관대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의 참여권은 철저히 배제되거나 발달단계에 상응한 참여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18-19쪽).

역설적으로 1997년에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 인권을 무력하게 만들었고 청소년보호를 국가 통치성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다. 학교 폭력 서클 일진회 사건이 발미가 되어 만들어진 청소년보호법은 원래 "청소년보호를위한유해매체규제에관한법률인"으로 제정될 예정이었지만, 문화적 표현물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의 부담을 덜고, 좀 더 폭넓은 청소년보호정책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현재의 법으로 제정되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 학대 등 청소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및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³⁾이라는 제정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대상들을 규제하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⁴⁾ 청소년보호법 제정을 기점으로 정부는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 안에 있던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격상시켜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 재편하면서, 유해매체, 유해약물, 유해장소 및 청소년 성범죄를 단속하는 강력한 청소년보호정책을 시행하였다. 현재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에 속해 있으면서 청소년보호주의를 더 강화하고 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2000년에 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은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문제는 이 법이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표현하는 모든 문화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사람들도 성범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어 청소년보호법과 함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데 있다⁵⁾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법적 장치로 가능하면서, 문화콘텐츠의 강력한 규제 장치뿐 아니라, 교육, 복지, 여가 분야에서 청소년을 미성숙한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통치성의 장치로 유포되었다. 청소년보호법은 "문자 그대로라면 청소년들을 소위 '유해환경'로부터 보호한다는 사회 윤리적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상을 넘어 실질적으로는 국가권력 행사의 새로운 장소가 되고 있음이 분명해지고 있"⁶⁾다. 특히 청소년보호법 제정 이래 청소년들의 문화여가 생활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청소년 유해매체 고시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음반 심의가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넘어온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된 곡은 국내외 곡을 합쳐 총 3,538곡에 이르고 해마다 유해매체 지정곡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16세 이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이용을 금지하는 강제적 섯다운제가 도입되었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의 심각성을 주장하며 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법률안, 가칭 게임중독법 제정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문화연대 등에서 제기한 강제적 게임섯다운제 위헌 소송을 기각하고 강제적 게임섯다운제를 합헌으로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인터넷게임 자체는 유해한 것이 아니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게임 이용률 및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게임의 특징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건강과 인터넷게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단지 16세 미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만 그 제공 및 이용을 금지하는 강제적 섯다운제가 청소년이나 그 부모, 인터넷게임 제공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할 헌법재판소 법

3) 『청소년보호법』, 1997, 총칙 부분 참고

4) 이동연, 「청소년보호법의 매체규제와 게임 섯다운제의 특이성」, 『게임섯다운제 위헌보고서』, 2014년 자료집 참고

5) 박경신, 「해외의 아동소재음란물규제 및 우리나라 형법 개정안」, 진정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만들기 토론회(2013년 12월 13일) 자료집 참고

6) 고길섭, 「문화의 시대와 국가권력의 이동」, 『진보평론』 1999, 겨울호 참고

관들이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의 심각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합헌의 근거로 제시할 정도로 청소년보호론은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권리보다 우선하는 국가 통치술을 확장하는 문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청소년을 보호해야한다"는 언술은 세월호에서 아이들이 배제되었듯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이 배제된 어른들의 통치술이고, 어른들의 보호 상업주의의 논리로 기능한다. 청소년보호 논리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적어도 청소년들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교육자율권, 문화 참여권을 보호하는 그 어떤 조항도 존재하지 않으며, 청소년보호론은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고 청소년을 훈육의 대상으로 강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한다.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론은 청소년들의 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결정권을 배제하는 제도이자 이데올로기인 셈이다.

배제된 아이들 정치와 인권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세월호 참사에서 아이들이 구조적으로 배제된 상황을 목도하면서, 이들이 다시 생환하여 이번 선거에 참여해 무능한 정부와 한심한 기성세대를 심판했다면 좋겠다는 부질없는 상상을 해본다. 그러나 그 상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이들 대부분이 죽거나 실종된 상태이고, 그나마 생존한 아이들에게는 투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을 비즈니스 이벤트의 대상으로, 훈육과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기성세대를 향해 투표로 심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청소년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참여의 주체에서 배제된 채, 그저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자아하는 보호의 주체로 설정된다.

청소년들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주체로 인정받았던 시절은 역설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해야한다는 어른들의 주장이 굳이 필요 없던 아주 먼 과거로 돌아간다. 동학혁명에서 4.19혁명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시절 청소년들은 적극적인 정치적 참여 주체로 스스로를 각인시켰다.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던져진 시민들의 고귀한 죽음에는 당시 고등학생들의 이름다운 희생이 뒤따랐다. 2.28일 대구에서도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잇달았고, 한국 민주주의 운동의 시발점인 4.19 혁명의 열기를 주도했던 주체들 중 하나도 바로 십대였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항일 독립운동을 위해 민주별판을 달리던 독립투사들은 이미 20이 채 안된 나이에 민족에 부름을 받았다. 조선말 부패관료 척결, 외세배척의 '보국안만'의 깃발을 올렸던 동학농민 혁명의 접주인 전봉준 역시 십대에 운동의 정점에 있었다.

십대들, 혹은 청(소)년들이 당대 사회의 정치적, 역사적 문제에 참여해 왔던 것은 적어도 해방 이전의 한국의 근현대사의 연대기를 놓고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십대들이 해방 이전과 이후의 한국 근현대사의 정치개혁 운동에 있어 중심주체가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청소년에 대한 훈육과 통제정책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가 원천적으로 규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군사정권이 등장하면서 청소년을 적절하게 통제, 훈육하려는 인구정책을 사용하게 되고,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통념들은 "오로지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 잘 듣는 아이"라는 고정관념을 심어주었다. 적어도 지금까지 현실정치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정치적 금치산자로 받아들여져 왔다. 기성세대, 특히 지배 권력은 청소년은 정치적 주장을 할 수 없는 주체, 혹은 오히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정치 참여는 아이들의 자이발달에 대단히 해로운 것으로 판단한다. 이 주장은 바로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선거권 연령이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제한한다는 위헌 소송을 기각하면서 한 말이다.

한국에서는 현재 만 19세가 되어야지만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만 19세가 안된 청소년들은 선거권을 통해 현실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있지 못하다. 세월호에서 생존한 학생들이 이번 지자체 선거를 통해 어른들을 심판할

기회란 애초부터 없다. "20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선거권이 있다"는 규정이 1960년 제정된 이후 40여 년이 지나도록 개정되고 있지 않다가 2004년에 만19세로 변경되었지만 여전히 한국의 선거연령은 절대적으로 높다. 그동안 사회적·정치적 변화, 교육수준·매체의 발달로 인해 청소년의 의식수준은 향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무시되고 있다. 한국에서 만 17세면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만 18세면 병역의 의무 대상이 된다. 또한 다른 권리(병역자원입대 17세, 일반운전면허 18세, 혼인적령 남자18세·여자 16세, 선거 자원봉사자 18세)등에 비해 선거권의 경우만 유독 권한부여 연령이 높다. 선진국을 포함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만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겠다는 근거에는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회 경험이 부족하여 올바른 선택과 책임을 지는 것이 힘들다는 어른들의 판단이 들어있다. 교실에서 하루 12시간 이상을 보내왔던 청소년에게 올바른 선택과 적극적인 정치적 참여를 요구하는 선거권은 아직 무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을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사회적 편견과는 무관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십대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자기결정권을 갖길 원한다. 표현하는 방법들은 다르겠지만, 청소년들의 행동과 발언의 기저에는 정치적 무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그들은 침묵하고 있을 뿐, 혹은 다른 스타일로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을 뿐,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대해 정치적 무의식을 가지고 있다. 입시 문제로 갈등하다 자살한 친구 앞에서, 담합과 뒷거래로 형편없는 수학여행의 밥상 앞에서, 세월호 참사로 수백 명 또래들의 사망자 실종자 앞에서 그들은 정당한 입장을 말하고 싶어 하고, 말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려는 움직임들을 종합해 볼 때, 나는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그들 내부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고 말하고 싶다. '청소년두발제한반대', '교복자유화운동', '청소년야외활동권확보', '청소년보호법폐지운동', '인터넷내용등급제반대', '게임셧다운제반대', 그리고 청소년 인권조례 지지와 같은 운동들은 청소년 행동의 자율권, 문화적 권리, 표현의 자유 등을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요구들을 종합해 보면 청소년인권의 신장을 위한 운동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은 침묵의 주체, 수동의 주체가 아니다. 단지 그들을 그렇게 훈육하고자 하는 어른들의 통치술이 존재할 뿐이다.

지금까지 청소년인권은 주로 아동학대, 노동착취, 가정폭력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들이 주를 이루었다. 말하자면 과거의 청소년인권은 주로 청소년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인권의 문제는 '보호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관리의 관점으로 옮겨가고 있다. 청소년권리로서의 인권을 말하는 당사자도 과거에는 주로 가족과 양심적인 기성세대였지만, 지금은 청소년들 스스로가 주를 이룬다. 이는 청소년인권에서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와 함께 사회참여의 권리는 중요한 연결지점이며, 청소년들 스스로가 청소년 인권을 말하는 발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청소년에게 선거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를 더 많이 주고, 그들의 인권을 스스로 말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실천해야 할 중요한 것들 중의 하나이다.

7) 청소년의 참정권은 그 특성상 연령제한에 의해 가로막혀 있었다. 그러나 20세 내지 21세로 규정되어 있던 투표 연령은 오늘날 18세로 낮추는 경향을 띤다. 1969년 영국을 시작으로, 1970년에는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에서 투표연령을 18세로 인하하였다. 뒤이어 미국(1971년, 수정헌법 제 26조), 아일랜드(1972년), 프랑스(1974년), 이탈리아(1975년), 구소련(1977년 헌법 제 96조), 중국(1975년 헌법 제 27조)에서도 18세로 연령을 인하하였다.(박혜린 「무엇이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가로막고 있는가」, 문화연대 청소년정치참여 토론회 자료집, 2002)

청소년들의 다양한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의제들은 겉으로 생각하는 것에 비해 훨씬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사회개혁을 요구한다. 정치권 내부이든, 교사나 학부모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권리를 부여하지는 의견을 제출하면,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대단히 어렵다. 일례로 청소년들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적 자기결정권을 위해 현행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면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민주당도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일부 진보적인 학부모단체나 여성단체 역시 현행 청소년보호법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청소년 연령에 대한 조정이나, 청소년 노동의 문제, 청소년 성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정치적 성향이 다른 집단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이 분야의 권리를 적극 확대하지는 주장에는 동참하지 않는다. “청소년보호법 폐지는 국가보안법 폐지보다 어렵다”는 말은 청소년에 대한 진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기 위한 헌법소원이 1996년에 이어 이번에도 기각된 것에는 객관적인 법률적 근거가 있었다기보다는 청소년을 인식하는 재판부와 기성사회의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부의 기각 사유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가 정치적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회의 보편감정에 상응하지 않는다’였다. 그렇다면 대학교 2학년이 되어도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미 90여개가 넘는 국가에서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선거연령의 현행 제도와 게임셋다운제에 대한 현재의 합헌 결정, 그리고 최근 저소득층 청소년 예술교육 예산의 공무원 및 교수들의 과렴치한 횡령 사건에서 청소년들이 배제된 방식은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아이들이 배제당한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청소년 정치참여의 정당함을 학습매진의 필요성으로 왜곡하거나,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의 현상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정작 청소년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은 채, 청소년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배네주엘라의 엘시스테마 교육 효과를 과다하게 포장하여 가난한 청소년들을 상대로 희대의 사기극을 펼치는 공무원과 교수들의 행동을 보면서 바로 그곳에 청소년이 있었는지를 반문하고 싶다. 세월호에서 철저히 그리고 처절하게 배제당한 아이들은 사실 언제나 늘 사회적으로 배제당한 셈이다. 죽음과 실종, 그리고 회복할 수 없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아이들의 이 참담한 현실은 어떤 점에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배제의 최종심급이라 할 수 있다.

모진 운명의 돌팔매와 재난의 바다

다시 『햄릿』으로 돌아가 보자. "사느냐 죽느냐"로 시작하는 저 유명한 3막 1장의 독백에서 햄릿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고뇌하는 자신의 정신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빗대어 말한다. “어느 것이 더 고귀한 정신일까? 모진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맞고 참는 것이, 아니면 온갖 재난의 바다에 맞서 무기를 들고 싸워 끝장을 내는 것이?” 이 실존적 고뇌는 매우 역설적이고, 양가적이다. 아버지의 무고한 죽음과 그로 인해 벌어진 참담한 현실을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 당당하게 복수를 결행할 것인가? 햄릿은 자신이 죽음으로써 세상의 모든 불의와 부패가 사라질 수 있는지, 아니면 죽어도 여전히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인지 고뇌에 빠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사느냐, 죽느냐"(To be, or not to be)라는 이 고뇌는 삶과 죽음이라는 실존, 복수의 결행과 외면이라는 행동 사이의 역설을 내재하고 있다. 자칫 산다는 것은 복수의 외면이요, 죽는다는 것은 복수의 실행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심지어 죽음이라는 영원한 수면 상태에서 꿀 지 모르는 악몽에 몸서리치며, 차라리 현실의 역겨움을 감수해야하는가 하는 자괴감에 빠진다. "그렇지 않고서야, 세상의 채찍과 비웃음을, 압제자의 비행과 거만한 자의 오만을, 멸시당한 사랑의 이품을, 재판의 지연과 관리의 오만을, 인내의 공덕이 무고하게 밟힐 질을 당하는 것을 누가 감수하랴"라는 독백은 햄릿이 처한 부조리한 현실과 그 참담한 현실에서 당장 죽지 못하는 이유를 말해 준다.

햄릿의 처지가 만일 세월호에 수많은 어린 희생자를 보내고, 현실에서 고뇌하는 우리의 처지라면,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모진 운명의 돌팔매를 맞아야 할까? 아니면 재난의 바다와 맞서 싸워야 할까? 중요한 것은 햄릿이 중얼거린 "재난의 바다"가 비유에 불과하다면, 세월호가 침몰한 "재난의 바다"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는 점이다. "재난의 바다", 햄릿의 이 비유의 대사가 지금 우리에게 현실이 된 것이다. 바다에서 상상할 수 없는 아이들의 재난이 발생했다. 재난의 바다는 현실이면서, 현실 속의 알레고리이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뱃골 수도는 거센 물살이 휘몰아치는 현실의 바다이며, 아이들은 이 바다에서 처참한 비극의 현실을 맞이했다. 재난의 바다는 또한 알레고리이다. 그 죽음의 재난이 너무나 참담하여, 그것이 일상에서 배제당한 아이들의 극단의 현실에 대한 우회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사실 햄릿의 대사, "재난의 바다"(a sea of troubles)에서 바다는 재난의 심각함을 비유하는 수사적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세월호의 바다는 수사적 표현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진도 앞바다 세월호 침몰 참사는 바다에서 벌어진 현실이면서, 배제당한 아이들의 극한의 현실을 너무도 잘 보여준 비극적 알레고리이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24일째, 2014년 5월 9일 경기도 안산 문화광장에 교복을 입은 안산 지역 고교생 2000여 명이 촛불을 밝혔다. 아이들은 발언대에서 "그들을 잊지 말라"고 당부한다. 아이들은 다음 달 브라질 월드컵 경기가 시작되면 세월호 참사가 금방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질까 두렵다고 말한다. 불안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씨월드, 인천호프집, 그리고 마우나리조트 재난은 이미 망각의 사건이 된지 오래고, 세월호 역시 곧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미안하다 너희들을 기억하겠다"고 수없이 말하지만, 정치, 교육, 문화의 일상에서 아이들이 배제당하는 현실이 지속되는 한, 기억은 곧 망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세월호에서 무참하게 배제당한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진 운명의 돌팔매를 맞아서 맞지 말고, 재난의 바다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햄릿 독백의 공백에서 진실의 의미를 읽어내듯이, "압제자의 비행과 거만한 자의 불손"에 맞서, "멀시당한 사랑의 아픔을" 보듬고, "재판의 지연과 관리의 오만"을 고발하며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세월호의 재난의 바다보다 더 끔찍하게 아이들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말이다. 그것은 세월호에서 배제당한 아이들을 슬프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처한 지금의 끔찍한 사태를 명심하는 것이다.